2026년 6월 시청자평가원 활동실적

방송사명(법인명) : 주식회사 연합뉴스티브이

1. 회의 개최

o 일시 및 참석인원

일 시	참 석 인 원		
	시청자평가원	시청자위원회	방송사측
-	-	-	-

2. 시청자평가프로그램 운영 실적

프로그램명	편성시간	편성시간 변경
바로보는TV 옴부즈맨	본방송 매주 일요일 03:50~04:20 (재방송 매주 월 00:30~01:00)	해당사항 없음

o 방송현황

※ 프로그램 제목과 평가원 진술 주제를 3줄 이내로 기술

평가원명	방송일	방송 주요 내용	비고
김정원	6/7	[뉴스프라임] "성범죄 나면 어쩌나"…입원실 '남녀 통합' 철회 [지방선거특집] 경제성장 기대감 커졌지만…고물가·고환율은 과제	
김경아	6/14	[뉴스포커스] 여, 선관위 사태에 "진상규명"…야 "재선거" [뉴스잇] 코스피 하루 만에 8,000선 회복…환율 급락	
김홍태	6/21	[뉴스리뷰]정부 "경기 회복 흐름 지속…물가·고용은 불안" [뉴스리뷰]신현송 "늦지 않게 금리 인상"…7월 신호 더 명확해져	
안지연	6/28	[뉴스워치] 온열질환자 벌써 약 300명…작년의 1.5배 [와이드17] 종전 서명에도 기름값은 '2천원대'…유가 하락 막는 변수는	

3. 시청자평가원 변동사항 '변동사항 없음'

구 분	성 명	전・현직	평가원 선임일	비 고 (변경사유 등)
활동	김홍태	대한변호사협회 권익위원	2018. 06. 28	-
활동	안지연	동명대학교 광고 홍보학과 초빙교수	2023. 01. 31	-
활동	김정원	한양대학교 ERICA 미디어학과 교수	2025. 08. 21	-
활동	김경아	한양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2026. 02. 20	-

붙임 : 1. 평가원 진술 및 답변내용 1부.

2. 시청자평가원 방송원고 1부.

[붙임1]

<평가원 진술 및 답변 내용>

방송일시	평가원명	평가원 진술내용	답변내용
2026 6/7(일)	김정원	"성범죄 나면 어쩌나"…입원실 '남녀 통합' 철회 최덕재기자 송고2026-06-01 20:06 정부가 병원 입원실의 남녀 구별 운영 규정을 폐지하려다 각계의 반발에 부딪혀 철회했습니다. 성범죄 우려와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탁상공론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연합뉴스TV 보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간병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병원 입원실의 남녀 구별 운영 규정을 폐지하려 했지만, 성범죄 노출 우려와 환자 불편을 호소하는 반발 민원이 쏟아지자 조건부 철회를 결정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남녀 구별 규정을 유지하되, 중환자실이나 부부·가족이 2인실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논란의 발단은 지난해 4월 광주광역시가 부부가 같은 병실을 쓰지 못해 간병비가 늘고 민원이 생긴다며 규제 개선을 건의한 것이었습니다. 현장에서는 환자와 보호자의 목소리를 먼저 듣지 않은 탁상공론이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이 보도는 정책 추진 배경과 철회 과정을 순서대로 정리하고, 국민 의견과 현장 전문가 목소리를 담아 논란의 핵심을 균형 있게 전달했습니다. 한편 간병비 부담이라는 정책 추진의 본래 취지는 여전히 유효한 문제인 만큼, 철회 이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적 접근이 무엇인지를 함께 짚었다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특히 복지부가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음에도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검토되고	사회부 연기에 답변

		있는지가 전달되지 않아 보도가 정책 철회 사실을 알리는 데 그친 점이 아쉽습니다.	
2026 6/14(일)	김경아	코스피 하루 만에 8,000선 회복…환율 급락 송고2026-06-09 17:48 김수빈 기자 자본 시장의 급격한 변동성은 개인의 재산을 넘어선 국가 경제 체력의 가늠자입니다. 자본 시장을 강타했던 '검은 월요일'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국내 증시는 하루 만에 기록적인 폭등세를 보이며 코스피 8000선을 단숨에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환율 또한 외환 당국의 개입 속에 1,510원대로 내려앉으며 가슴을 쓸어내리게 했는데요. 극단적인 롤러코스터 장세 속에서 시장의 내밀한 신호와 위험성을 연합뉴스 TV는 어떻게 짚어내고 있을까요? 지난 8일,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과 기관의 무차별 매도세로 인해 7,500선마저 무너지며 금융 시장 전체가 깊은 공포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 날인 9일, 저가 매수세의 유입과 금융 당국의 시장 안정화 조치에 힘입어 코스피는 하루 만에 8% 급등하는 기염을 토하며 8,000포인트를 다시 회복했습니다. 보도는 역대 최대 수준의 변동성 추이를 전달하며, 불안정한 대내외 환율 여건과 금리 추이를 입체적으로 진단했습니다. 본 보도는 단기적 급등이라는 가시적 성과에 취해 시장을 낙관적으로만 포장하는 유토피아적 서사를 경계했습니다. 보도 후반부에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 200 변동성지수가 장중 90선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사실을 배치함으로써 시장의 겉모습은 폭등했지만 내부의 심리적 불안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본질적 위험을 균형감 있게 보도했습니다. 또한 매수 사이드카 발동 상황과 외환 당국의 개입을 유기적으로 엮어 시장 반등의 동력을 다각	지수가 큰 변동성과 기록을 보일 때마다 단순히 수치를 전하기보다 경계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기사를 통해 환기시키고 있고 앞으로도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 투자자들이 취할 수 있는 전략을 좀더 구체적으로 소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로 짚어낸 점은 우수합니다. 그러나 시장에서 나타나는 불안을 해소하는 자산 보호 가이드라인과 같은 제시가 필요합니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는 추상적인 권고로 맺기보다, 이와 같은 초변동성 국면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 또는 자산 배분 원칙을 금융 전문가를 통해 전달했다면 공익성과 실용성을 모두 갖춘 보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2026 6/21(일)	김홍태	정부 "경기 회복 흐름 지속…물가·고용은 불안" 송고2026-06-12 21:06 배시진기자 이 보도는 정부의 공식 경제 진단인 '그린북'을 중심으로 우리 경제의 현재 상황을 종합적으로 전달하고 있는데요, 특히 경기 회복 흐름과 함께 물가 상승, 고용 둔화라는 상반된 요소를 균형 있게 소개해 경제 상황을 나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경기 하방 위험'이라는 표현이 사라지고 '불확실성'이라는 표현이 새롭게 등장한 배경을 설명하며 정부의 경제 인식 변화를 짚어준 점도 임팩트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에 소비자물가 상승률, 취업자 감소, 청년 고용 악화, 세계은행의 성장률 전망 등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해 보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과 고용 악화가 국민 생활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현장 사례가 있었음 좋았을 것인데요, 예를 들어 청년 구직자, 자영업자, 직장인 등의 인터뷰를 통해 체감 경기 상황을 함께 전달했다면 시청자들이 더 공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중동 전쟁으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이 국내 물가에 어떤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지, 향후 금리와 환율에는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이기도했습니	정부의 경제 진단에 대해 청년, 직장인 등 다양한 목소리가 함께 전달될 수 있도록 더욱 신경 쓰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 추후 경제 지표와 함께 국민 생활과 연결된 의미를 분석하는 보도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특히 청년 고용 감소의 원인과 해결 방안,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효과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면 방송의 완성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2026 6/28(일)	안지연	온열질환자 벌써 약 300명…작년의 1.5배 최덕재 기자 입력 2026-06-18 16:52:53 이른 더위가 이어지면서 온열질환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관련 환자가 늘고 있는데요. 지난주 연합뉴스TV의 관련 보도 살펴보겠습니다. 보도는 올해 온열질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이번달 16일까지 응급실을 찾은 온열질환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1.5배 수준인 297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남성 온열질환자 수는 206명으로 전체의 69.4%를 차지해, 여성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40대와 30대가 가장 많았지만, 전체의 30%가 65세 이상 고령자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질환별로는 열탈진이 가장 많았고, 열사병과 열실신이 뒤를 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보도는 온열질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을 전달했습니다. 통계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환자가 1.5배 늘었다는 수치를 통해 더위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며, 예방의 필요성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남성이 전체의 69.4%를 차지했고,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의 30%에 이르렀다는 점을 함께 제시해, 어떤 집단이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지도 분명하게 드러냈습니다. 여기에 열탈진, 열사병, 열실신 등 주요 질환 유형	사회부 여기에 답변

		을 함께 전해, 온열질환이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가 필요한 문제임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보도는 온열질환 증가 상황을 전달했지만, 실제로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다루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시기인 만큼, 예방을 위한 생활 수칙이나 증상 발생 시 대처 방법까지 함께 제시됐다면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보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붙임2]

<시청자평가원 방송원고>

● 김정원 시청자평가원(26. 06. 07. 방송) :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758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한 주간 보도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TV를 말한다 김정원입니다. 정부가 병원 입원실의 남녀 구별 운영 규정을 폐지하려다 각계의 반발에 부딪혀 철회했습니다. 성범죄 우려와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탁상공론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연합뉴스TV 보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간병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병원 입원실의 남녀 구별 운영 규정을 폐지하려 했지만, 성범죄 노출 우려와 환자 불편을 호소하는 반발 민원이 쏟아지자 조건부 철회를 결정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남녀 구별 규정을 유지하되, 중환자실이나 부부·가족이 2인실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논란의 발단은 지난해 4월 광주광역시가 부부가 같은 병실을 쓰지 못해 간병비가 늘고 민원이 생긴다며 규제 개선을 건의한 것이었습니다. 현장에서는 환자와 보호자의 목소리를 먼저 듣지 않은 탁상공론이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이 보도는 정책 추진 배경과 철회 과정을 순서대로 정리하고, 국민 의견과 현장 전문가 목소리를 담아 논란의 핵심을 균형 있게 전달했습니다. 한편 간병비 부담이라는 정책 추진의 본래 취지는 여전히 유효한 문제인 만큼, 철회 이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적 접근이 무엇인지를 함께 짚었다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특히 복지부가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음에도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지가 전달되지 않아 보도가 정책 철회 사실을 알리는 데 그친 점이 아쉽습니다. 6·3 지방선거 이후 정부 경제정책의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성장률 전망이 잇따라 상향 조정되며 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고환율과 고물가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보도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OECD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7%에서 2.6%로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한국은행도 같은 수치로 전망치를 올렸는데,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증가세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타난 영향입니다. 정부는 연간 수출액이 9천억 달러를 넘어 세계 5위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금융위기 당시 기록을 넘어 11거래일 이상 1,500원대를 이어가고 있고, 5월 소비자물가는 2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3.1%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석유류 물가는 24.2% 급등했습니다.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을 위해 7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상황으로, 서민들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삼중고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방선거 이후 민생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정부는 경기 회복 흐름을 이어가면서도 물가와 환율을 안정시켜야 하는 이중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이 보도는 성장률 상향 조정이라는 긍정적 신호와 고환율, 고물가라는 부정적 현실을 균형 있게 대비시켜 현재 경제 상황을 입체적으로 전달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시청자들이 체감하기 쉽게 구성한 점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한편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언급됐음에도 이것이 서민 경제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설명이 빠진 점은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고물가·고환율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까지 더해질 경우 가계 부채 부담이 어느 수준까지 커질 수 있는지를 함께 짚었다면 경제 지표 나열을 넘어 서민들이 직면한 현실을 더 구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 공약을 비교하거나 정보

를 정리하는 데 AI를 활용하는 유권자들이 늘었습니다. 편리한 도구이지만 할루시네이션과 편향성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연합뉴스TV 보도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 한 명이 골라야 하는 후보만 약 7명 수준입니다. 교육감, 시·도지사, 지역구 의원 등의 공약을 일일이 찾기 어렵다 보니 AI로 후보별 공약을 항목별로 비교, 정리하거나 과거 공약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유권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정보를 얻으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딥 리서치 같은 검색 도구를 활용하지 않으면 팩트체크가 어렵고, AI 특유의 할루시네이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느 후보를 선택할지 AI에게 묻는 경우 편향성 문제도 경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해외에서도 선거를 앞두고 AI를 활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는 만큼, 기술이 발전할수록 섬세하게 활용하는 것은 사람의 몫이라는 조언이 나옵니다. 이 보도는 AI가 선거 정보 탐색의 새로운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는 현상을 선거 시즌에 맞춰 시의적절하게 다뤘습니다. 기술 발전이 유권자의 정보 접근 방식을 바꾸고 있다는 사회적 변화를 구체적인 사례로 포착한 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만 보도가 개인의 교차 검증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그친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자발적으로 교차 검증을 하지 않거나 방법을 모르는 유권자들을 위한 공식적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나 AI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등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까지 짚었다면 보도가 더욱 실질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6·3 지방선거 당일 부정선거 감시를 명목으로 개설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투표지 사진이 무더기로 공유돼 선관위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투표소 곳곳에서 소란도 이어졌는데요. 연합뉴스TV 보도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방선거 본 투표 당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투표용지 사진과 투표자 수 계수지 등이 다수 공유됐습니다. 계수지에는 투표소명과 참관인 이름, 투표자 수가 적혀 있었고 '한미 공동 부정선거 조사단'이라는 표기도 있었습니다. 선관위는 투표소 내 촬영을 금지하고 있으나, 참관인의 촬영 자체를 법적으로 제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며 소란 행위나 무효 투표지 촬영의 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투표소 곳곳에서 소동도 벌어졌습니다. 서울 영등포구에서는 재투표를 시도하다 적발된 사례가 있었고, 관악구에서는 투표용지를 촬영하다 제지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인천에서는 투표용지를 덜 받은 것 같다며 재투표를 요구하는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이 보도는 투표 당일 벌어진 논란을 현장감 있게 전달하고, 선관위의 법적 검토 현황까지 구체적으로 짚어 사안의 쟁점을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한편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움직임이 선거 때마다 반복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구조적 배경이나 사회적 맥락에 대한 분석이 빠진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선거 제도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과 이를 완화하기 위한 선관위나 시민사회의 대응 방향을 함께 짚었다면 보도가 단순한 사건 전달을 넘어 민주주의 선거 문화에 대한 논의로 이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6·3 지방선거에서 서울 14개 투표소의 투표용지가 바닥나 투표가 일시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고 투표를 못 하고 돌아간 시민도 나왔는데요. 연합뉴스TV 보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선거 당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송파구·강남구·광진구 등 14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소진돼 투표가 중단됐습니다. 선관위는 뒤늦게 용지 이송에 나섰고, 오후 6시 이전 도착자에게 대기표를 배부해 마감 이후에도 투표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그 사이 유권자들은 장시간 줄을 서야했고, 일부 투표소는 밤 10시까지 투표 시간을 연장했지만 혼선 속에 투표를 못 하고 돌아간 시민도 적지 않았습니다. 선관위는 투표율이 크게 높아지면서 벌어진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대국민 사과 브리핑을 열고 책임을 통감

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심각했던 송파구는 총 유권자 수의 50%만 용지를 인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선관위의 사과에도 투표소 앞 항의는 밤늦게까지 이어지면서 파장은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이 보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경위와 현장 혼란, 유권자 반응을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는 과정을 현장감 있게 담아낸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편 투표용지 수량 산정 과정에서 어떤 오류가 있었는지, 즉 왜 유권자의 절반 분량만 인쇄하는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 설명이 빠진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또한 선관위의 뒤늦은 대응과 미흡한 현장 안내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보완됐다면 사태의 심각성을 더 온전히 전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여파가 선거 다음 날에도 이어졌습니다. 일부 투표소 앞에서는 투표함 반출을 막는 대치 상황까지 벌어졌고, 법적 분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연합뉴스TV 보도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일부 유권자들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투표함 반출을 막아서는 대치 상황이 한밤까지 이어졌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유권자의 투표권이 박탈됐다며 선관위를 고발했습니다. 2021년 독일 베를린에서는 잘못된 투표용지 배부와 투표소 운영 중단 등이 겹쳐 2년 뒤 재선거가 치러진 사례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이번 선거는 마감 전 도착 유권자에게 번호표를 배부해 투표 기회를 보장한 만큼 선거 전체를 무효로 돌리기는 어렵다고 분석합니다. 다만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처럼 수백 표 차이로 당락이 갈리는 경우 용지 부족으로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의 존재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둘러싼 분쟁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선관위는 부족했던 용지 수 등을 추후 파악해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도는 사태의 후폭풍을 법적 쟁점과 해외 사례를 통해 입체적으로 조명했습니다. 전문가 찬반 의견을 함께 담아 법적 분쟁 가능성을 균형 있게 전달한 점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다만 법적 분쟁 가능성을 짚는 데 집중한 나머지 앞으로의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투표하지 못하고 돌아간 유권자에 대한 피해 구제 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번 사태가 드러낸 투표용지 수량 산정 체계의 허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를 함께 짚었다면 보도가 사건 전달을 넘어 실질적인 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TV, 시청자 평가였습니다.

● 김경아 시청자평가원(26. 06. 14. 방송) :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759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한 주간 보도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TV를 말한다 김경아입니다. 6.3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불러온 후폭풍이 선거가 끝난 지 수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치권을 거세게 흔들고 있습니다. 여야는 각각 '진상규명'과 '재선거'라는 서로 다른 해법을 내세우며 팽팽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선거의 신뢰성과 유권자의 헌법적 권리가 위협받는 이 엄중한 정국에서, 언론은 양당의 목소리를 어떻게 균형 있게, 그리고 깊이 있게 다루고 있을까요? 연합뉴스TV의 보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보도는 6.3 지방선거 당일 발생한 초유의 투표용지 조기 소진 사태에 대해 여야 지도부가 일제히 선관위를 비판하면서도, 해법을 두고 첨예하게 맞서는 상황을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민주주의와 참정권 모두를 치명적으로 훼손한 참사라며국회 차원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 밖에 답이 없다며 재선거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정부와 선관위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보도는 이러한 여야의 대조적인 요구 사항과 팽팽한 신경전을 정리하여 타전했습니다. 본 보도는 단편적인 여야 공방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시청자가 상황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쟁점을 체계적으로 전달했습니다. 민주당의 '국정조사 및 진상규명' 카드와 국민의힘의 '특검 및 재선거' 요구를 대조적으로 짚어내는 한편,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의 운영 방향과 활동 범위, 인원 구성 등의 정보를 꼼꼼히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비평적 관점에서 볼 때, 본 보도는 헌법기관의 선거 관리 부실이라는 국가 거버넌스의 붕괴 문제를 단순한 여야의 정파적 대결 구도로 치환하는 정쟁화 프레임에 머물렀습니다. 실제로 유권자가 궁금해할 선거 무효 소송의 법리적 성립 요건이나, 선관위가 발표한 전국 투표 용지 부족 투표소의 행정적 과실 경로에 대한 날카로운 추적 보도가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투표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한 유권자들의 구제 절차와 선관위의 내부 혁신안 검증까지 함께 다룸으로써 합리적 대안을 이끌어 가기를 기대합니다. 자본 시장의 급격한 변동성은 개인의 재산을 넘어선 국가 경제 체력의 가늠자입니다. 자본 시장을 강타했던 '검은 월요일'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국내 증시는 하루 만에 기록적인 폭등세를 보이며 코스피 8000선을 단숨에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환율 또한 외환 당국의 개입 속에 1,510원대로 내려앉으며 가슴을 쓸어내리게 했는데요. 극단적인 롤러코스터 장세 속에서 시장의 내밀한 신호와 위험성을 연합뉴스 TV는 어떻게 짚어내고 있을까요? 지난 8일,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과 기관의 무차별 매도세로 인해 7,500선마저 무너지며 금융 시장 전체가 깊은 공포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 날인 9일, 저가 매수세의 유입과 금융 당국의 시장 안정화 조치에 힘입어 코스피는 하루 만에 8% 급등하는 기염을 토하며 8,000포인트를 다시 회복했습니다. 보도는 역대 최대 수준의 변동성 추이를 전달하며, 불안정한 대내외 환율 여건과 금리 추이를 입체적으로 진단했습니다. 본 보도는 단기적 급등이라는 가시적 성과에 취해 시장을 낙관적으로만 포장하는 유토피아적 서사를 경계했습니다. 보도 후반부에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 200 변동성지수가 장중 90선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사실을 배치함으로써 시장의 겉모습은 폭등했지만 내부의 심리적 불안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본질적 위험을 균형감 있게 보도했습니다. 또한 매수 사이드카 발동 상황과 외환 당국의 개입을 유기적으로 엮어 시장 반등의 동력을 다각도로 짚어낸 점은 우수합니다. 그러나

시장에서 나타나는 불안을 해소하는 자산 보호 가이드라인과 같은 제시가 필요합니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는 추상적인 권고로 맺기보다, 이와 같은 초변동성 국면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 또는 자산 배분 원칙을 금융 전문가를 통해 전달했다면 공익성과 실용성을 모두 갖춘 보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글로벌 인공지능 시장을 좌우하는 거물,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가 한국에 남기고 간 선물 보따리에 시장이 뜨겁게 들썩이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동맹부터 거대 인프라 구축까지, 화려한 밀월 관계의 서막이 올랐는데요. 그러나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강대국과 글로벌 거대 기업 간의 기술 패권 전쟁 속에서 남겨진 과제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보도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의 방한을 계기로 한 국내 대기업들과의 차세대 메모리, AI 팩토리, 피지컬 AI 동맹 구축 성과를 다루었습니다. 동시에 이러한 밀월 이면에 숨겨진 '플랫폼 종속'과 'AI 주권 훼손' 위험을 경고하며, 독자적인 월드 모델 기술 확보를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강점을 지닌 제조 데이터를 활용해 독자적 AI 기술력을 키워야 한다는 전문가의 제언을 담았습니다.
끝으로 우수 연구자 유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실무적인 제조 인프라 정비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본 보도는 젠슨 황이라는 글로벌 빅테크 권력자의 방한을 다루면서 언론이 흔히 빠지기 쉬운 기술 낙관주의를 적절히 경계했습니다. 대기업들이 얻어낸 단기적 수혜와 주가 상승 등의 성과를 찬미하는 일방적 서사에서 벗어나 엔비디아 시스템에 대한 플랫폼 종속과 국가 AI 주권의 상실이라는 거시적인 기술 안보적 위험성을 정면에 배치한 점은 저널리즘의 비판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한 대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리포트가 제기한 난제들에 대한 구체적 정책 추적과 사회적 합의의 영역으로 보도의 지평을 넓히지는 못했습니다. 먼저 인재 유출의 원인을 진단함에 있어 제도적, 정책적 메커니즘 분석이 아쉬웠습니다. 기사는 국내 석·박사급 연구자들과 대학 교수들의 해외 유출을 단순한 처우 문제로 환원하여 요약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학계와 R&D 현장이 요구하는 것은 획일적인 정부 연구비 카르텔 규제 완화, 그리고 대기업과 대학의 실질적 연구 결합을 가로막는 행정적 지체일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 중심의 기술 경쟁력 담론을 우리 생활과 직결된 문제로 풀어내야 합니다. AI 주권이나 전력망 같은 낯선 개념이 일반 국민의 개인 정보 보호, 일자리 변화, 그리고 가정의 전기 요금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시민 밀착형 보도가 필요합니다. 한 사회의 건강성을 측정하는 정직한 지표는 바로 아이들의 삶일 것입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청소년 자살자 수와 급증하는 정신건강 진료 수치는 우리 사회의 안전망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음을 경고하는데요. 관련 보도 살펴보겠습니다. 보도는 우리나라 10대 청소년의 사망 원인 1위가 14년째 자살이라는 어두운 지표로 포문을 엽니다. 학업 스트레스와 가정불화 등으로 목숨을 끊은 청소년이 지난해 역대 최다인 396명에 달했습니다. 이에 교육부 등 15개 부처는 사회정서교육 확대, 경찰·소방·교육청 간 정보 공유 시스템 강화, AI 위기징후 발굴 및 마음 CPR 교육 도입을 골자로 한 정부 대책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보도는 후반부에 이미 시행 중인 정책들의 나열이라는 안팎의 쓴소리를 함께 전했습니다. 이어 교원단체들의 성명을 빌려 극한 입시 경쟁이라는 교육 현실의 개혁이 근본적으로 선행되어야 함을 지적했습니다. 본 보도는 청소년 자살이라는 극도로 예민하고 무거운 주제를 다루면서 언론이 범하기 쉬운 감상주의적 과열이나 자극적 모방 심리 유발을 철저히 경계했습니다. 비극의 수치를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살 고위험군 청소년들의 병원 진료 통계와 유가족의 인지 비율을 제시함으로써 사안의 엄중함을 차분하게 각인시켰습

니다. 특히 정부가 발표한 대책을 그대로 수용하여 홍보해 주는 받아쓰기 프레임에서 벗어나, 학계 전문가의 쓴소리와 교원단체의 교육 현실 비판을 덧붙여 입체적으로 보도한 점이 돋보입니다. 하지만 교원단체들이 지적한 극한 경쟁의 교육 현실은 기사 마지막 한 줄의 의견으로 가볍게 처리될 사안이 아닙니다. 후속 심층 보도를 통해, 아이들을 끊임없이 서열화하고 사교육 시장으로 모는 대한민국의 병리적인 교육 구조가 곧 정신건강 악화의 근본적 결정요인임을 지적하고, 이를 개혁하기 위한 입법·제도적 논의를 뉴스 전면에 배치하는 주도적인 저널리즘으로 진화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출산율과 혼인 건수가 조금씩 반등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을 꾸리고도 정작 혼인신고만은 1년 넘게 미루는 청년들이 급증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결혼하는 순간 주거와 금융, 세제 혜택에서 오히려 불이익을 받게 되는 이른바 결혼 패널티 때문입니다. 관련 보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보도는 출산율과 혼인 건수의 반등세 속에서도 혼인신고를 1년 이상 미루는 비율이 10년 새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는 역설적인 실태로 시작합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청년들이 가정을 꾸리면서 주거·금융·세제상의 불이익을 받는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우선 맞벌이 신혼부부의 행복주택 입주 소득 기준이 월 763만원에서 939만원으로 높아집니다. 경차 2대를 보유한 부부에게도 1대 분의 유류세 환급 혜택을 유지하는 것과 같은 생활 밀착형 세제 지원안을 제시하며, 향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약속하는 정부 입장으로 보도는 마무리됩니다. 본 보도는 청년 세대가 체감하는 '결혼 패널티'라는 다소 추상적인 정책 용어를 시청자의 일상과 밀접한 실물 언어로 풀어냈습니다. 주택 소득 기준 수치나 가산금리 인하, 경차 유류세 환급 같은 구체적인 생활 밀착형 팩트들을 조목조목 나열해 정보의 공익성과 유용성을 더했습니다. 특히 저출생 극복이라는 담론을 관념적으로 소비하지 않고, 청년들이 혼인신고를 미룰 수밖에 없는 미시적이고 합리적인 비용 계산의 맥락을 짚어준 점이 돋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도는 행정안을 그대로 받아적는 정책 브리핑에 머물며 저널리즘 고유의 비판적 해설 기능을 충분히 살리지 못했습니다. 특히 정부 대책이 청약이나 공공임대 이용이 가능한 특정 소득층에 편중된 반면, 불안정한 고용이나 비정규직 일자리로 청약 및 저축 가입조차 꿈꾸지 못하는 취약계층 청년들을 보듬는 비판적 메스를 대지는 못했습니다. 언론은 단순히 정책의 전달자가 아니라 제도의 사각지대를 찾아내고 합리적 대안을 함께 고민하는 든든한 동반자여야 합니다. 연합뉴스TV가 앞으로도 우리 사회 취약한 곳의 목소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예리하게 검증하는 감시자이자 중재자로서 그 책무를 아끼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TV, 시청자 평가였습니다.

● 김홍태 시청자평가원(26. 06. 21. 방송) :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760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원샷>
한주간 보도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TV를 말한다, 김홍태입니다. 지난 주 뉴스리뷰에서는 정부가 우리 경제에 대해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물가와 고용 등 부담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진단을 내놨다고 전했습니다. 정부가 매달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 진단한 내용을 담아 발표하는 '최근 경제동향', 그린북 6월호에서 재정경제부는 최근 우리 경제가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중동 전쟁에 따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는 평가인데요, 중동 여파에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3% 넘게 뛰었고, 고용은 1년 5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상황입니다.
지난 3월부터 석 달 연속 등장했던 '경기 하방 위험' 단어가 빠지고 '불확실성'이라는 표현이 새로 등장한 건데요, 중동발 불안이 존재하지만,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 OCED 등 국내외 기관에서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점 등이 반영됐습니다. 하지만, 중동 여파로 인한 물가 상승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고용 한파는 부담 요인으로 지목됐는데요, 지난달 취업자는 1년 전보다 4만 명 줄어 지난 2024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고, 청년층 취업자는 25만 명 넘게 줄었는데요, 그린북에 '고용 불안 우려'라는 표현이 담긴 건 비상계엄 사태가 있던 지난 2025년 1월 이후 1년 5개월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세계은행은 전세계적 에너지 가격 급등의 영향으로 올해 세계 경제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저 수준인 2.5% 성장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이 보도는 정부의 공식 경제 진단인 '그린북'을 중심으로 우리 경제의 현재 상황을 종합적으로 전달하고 있는데요, 특히 경기 회복 흐름과 함께 물가 상승, 고용 둔화라는 상반된 요소를 균형 있게 소개해 경제 상황을 나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경기 하방 위험'이라는 표현이 사라지고 '불확실성'이라는 표현이 새롭게 등장한 배경을 설명하며 정부의 경제 인식 변화를 짚어준 점도 임팩트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에 소비자물가 상승률, 취업자 감소, 청년 고용 악화, 세계은행의 성장률 전망 등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해 보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과 고용 악화가 국민 생활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현장 사례가 있었음 좋았을 것인데요, 예를 들어 청년 구직자, 자영업자, 직장인 등의 인터뷰를 통해 체감 경기 상황을 함께 전달했다면 시청자들이 더 공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중동 전쟁으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이 국내 물가에 어떤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지, 향후 금리와 환율에는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이기도했습니다. 추후 경제 지표와 함께 국민 생활과 연결된 의미를 분석하는 보도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특히 청년 고용 감소의 원인과 해결 방안,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효과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면 방송의 완성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주 뉴스리뷰에서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늦지 않게 금리 인상을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면서, 물가와 집값, 환율까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판단인데요. 시장의 관심은 이제 인상 시기와 폭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은의 거듭된 인상 신호는 시장의 7월 인상 전망에도 힘을 싣고 있는데요, 실제 국내 소비자물가는 3%를 웃돌며 한은 목표치인 2%를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유가도 쉽게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환율이 장기간 1,500원을 웃돌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전했습니다. 신 총재는 환율이 점차 안정될 것으로 보면서도, 중동 변수로

변동성이 이어지면 물가 압력을 키울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관건은 금리 인상의 시기와 폭인데요, 금통위원들의 6개월 뒤 금리 전망을 담은 점도표에서는 3.25%를 가리키는 점도 등장했습니다. 다만 새로운 뇌관은 '빚투'인데요, 신 총재 역시 과도한 차입 투자가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금리 인상이 불가피해진 가운데, 한은이 어떤 속도로 긴축 페달을 밟을지 관심이 쏠린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이 보도는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중심으로 물가, 환율, 가계부채 등 주요 경제 현안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특히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을 바탕으로 금리 인상 배경을 소개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인 2%를 크게 웃도는 상황과 환율 상승, 국제유가 불안 등 금리 인상 압력이 커지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부분은 좋았습니다. 또한 금리 인상이 단순한 금융정책 문제가 아니라 가계대출과 투자시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함께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리 인상이 실제 국민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설명은 조금 보강이 필요했는데요,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가계의 이자 부담이 얼마나 증가할 수 있는지, 예금금리는 얼마나 오를 수 있는지, 자영업자와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등 설명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또한 금리 인상의 긍정적 효과인 물가 안정과 부동산 시장 과열 억제 효과와 함께 경기 둔화 가능성이라는 부정적 측면도 전달했다면 조금은 균형 잡힌 보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해외 주요국의 금리 정책과 비교해 우리나라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도 설명한다면 시청자들의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와이드08에서는 범죄 수법은 기술의 발전과 함께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AI를 악용한 딥페이크와 보이스피싱 범죄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시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고 전하며, 올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미래 범죄에 맞서고 있는 치안 영웅들을 취재했다고 전했습니다. 수화기 너머 들려오는 울면서 전화하는 아이의 목소리에 엄마는 순식간에 패닉에 빠지지만, 아이 목소리는 AI로 만든 가짜로,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이라고 합니다. 화면에 나타나고 있는 온라인 채팅앱에서 만나 돈을 요구한 긴 머리의 여성 역시 딥페이크 기술로 만든 가상인물이며, 신문 형태의 조작물, 선거 후보의 딥페이크 영상 등 가짜뉴스 유포에도 AI가 동원되는 등 AI 범죄는 이미 우리 일상 깊숙이 파고들었다고 합니다. 기술의 발달로 범죄 진입장벽 자체가 낮아지면서 이 같은 사이버범죄는 지난해 36만여 건으로 3년 새 약 57%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에 맞서 경찰도 AI를 활용한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고 있는데요, 통화 데이터를 AI로 분석해 피싱 시도를 사전에 탐지하고, 범행에 이용된 번호와 통화 패턴을 학습해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전화번호를 미리 차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보도는 AI 기술 발전이 가져온 편리함뿐 아니라 새로운 범죄 위험성을 시청자들에게 알기 쉽게 전달했다는 점이 상당히 좋은데요, 특히 AI 음성복제 보이스피싱, 딥페이크 영상, 가상인물을 이용한 사기 등 실제 사례를 통해 미래 범죄가 이미 현실이 되었음을 보여주었고, 경찰이 AI 기술을 활용해 범죄에 대응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범죄가 3년 새 약 57% 증가했다는 통계와 현장 경찰관 인터뷰를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전달한 점도 좋아보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AI 범죄의 위험성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말고 시청자들이 실제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상세히 소개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만약 가족이나 지인에게 돈을 요구하는 전화가 온다면 직접 재확인하고, 함께 영상통화나 문자 확인을 하라던지, SNS에서 만난 상대의 신원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등의 간단한 예방책도 전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AI 범죄의 유형별 사례와 피해, 해외 대응 사례 그리고 청소년, 고령

층 등 범죄 취약 계층이 어떤 방식으로 표적이 되는지 분석한다면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오늘에서는 악성 민원에 아동학대 신고 위협까지, 교육 현장에서 교권 침해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지 오래라면서, 이런 현실을 담은 드라마와 유튜브 콘텐츠가 여럿 등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달 공개된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은 무너진 학교 현장에 교육부 직속 기관 교권보호국이 투입돼 학교를 바로잡아 나가는 이야기인데요, 학교 폭력과 악성 민원 등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판타지적 설정이 나옵니다. 넷플릭스 순위에서 한국을 비롯해 홍콩과 인도, 싱가포르 등 25개국 1위에 올랐고, 비영어 TV쇼 부문 글로벌 1위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교육계는 이 드라마의 인기가 교권 붕괴 현실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증명한다면서도 드라마 속 해법에 대해선 교권 붕괴를 가속화하는 기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계하기도 했습니다. 유치원 교사 '이민지 씨'를 연기한 코미디언 이수지의 유튜브 콘텐츠도 화제가 됐는데요, 새벽 출근부터 끊이지 않는 학부모 연락과 과도한 업무 부담까지, 교사의 현실을 풍자했습니다. 정덕현 대중문화 평론가는 그만큼 대중들이 이 교권 관련된 문제, 교육 관련된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고,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묶여있는 갈증을 풀고 싶은 욕망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어른이 애들을 무서워하면, 세상은 망하는 겁니다'라는 드라마 참교육 속 대사처럼, 교육 현장을 다룬 콘텐츠들이 교권의 현주소를 말하고 있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이 보도는 최근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교권 침해 문제를 드라마와 유튜브 콘텐츠라는 친숙한 소재를 통해 소개함으로써 시청자들의 관심과 공감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요, 특히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과 교사 현실을 풍자한 콘텐츠를 사례로 제시하여 교권 침해가 이제는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임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권보호위원회 운영 현황, 교권 침해 신고 건수 변화, 교사들의 심리적 부담과 이직 문제 등은 앞으로 보도에서 함께 소개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추가적으로 해외의 교권 보호 사례나 성공적인 학교 공동체 운영 사례를 찾아 소개한다면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건강한 교육 환경은 교사와 학생, 학부모 모두의 상호 존중과 책임 있는 행동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기억하고,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TV 시청자평가였습니다.

● 안지연 시청자평가원(26. 06. 28. 방송) :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761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한 주간 보도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TV를 말한다 안지연입니다. 이른 더위가 이어지면서 온열질환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관련 환자가 늘고 있는데요. 지난주 연합뉴스TV의 관련 보도 살펴보겠습니다. 보도는 올해 온열질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이번달 16일까지 응급실을 찾은 온열질환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1.5배 수준인 297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남성 온열질환자 수는 206명으로 전체의 69.4%를 차지해, 여성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40대와 30대가 가장 많았지만, 전체의 30%가 65세 이상 고령자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질환별로는 열탈진이 가장 많았고, 열사병과 열실신이 뒤를 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보도는 온열질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을 전달했습니다. 통계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환자가 1.5배 늘었다는 수치를 통해 더위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며, 예방의 필요성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남성이 전체의 69.4%를 차지했고,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의 30%에 이르렀다는 점을 함께 제시해, 어떤 집단이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지도 분명하게 드러냈습니다. 여기에 열탈진, 열사병, 열실신 등 주요 질환 유형을 함께 전해, 온열질환이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가 필요한 문제임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보도는 온열질환 증가 상황을 전달했지만, 실제로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다루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시기인 만큼, 예방을 위한 생활 수칙이나 증상 발생 시 대처 방법까지 함께 제시됐다면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보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국제유가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내 주유소 판매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가 하락과 실제 가격 사이에 왜 차이가 생기는지에 대한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보도는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기름 가격에 주목했습니다. 국제유가는 하락했지만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여전히 2천원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발이 묶였던 유조선들도 움직임을 재개하게 됐지만, 국내 도착까지 20일 안팎의 시간이 걸립니다. 여기에 선박 병목현상이 벌어질 것을 고려한다면 유가 하락은 최소 3주의 시차를 두고 발생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아직 70달러대로 떨어진 유가가 국내 가격에 반영되기에는 시차가 충분하지 않았고, 석유 재고가 많이 빠져 있는 상황도 가격 인하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가 우선돼야 하고, 현재의 국제유가 하락세가 얼마나 지속될지도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최고가격제가 오히려 인하 속도를 늦추고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섣불리 종료할 경우 유가가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남아있어 더욱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이 보도는 국제유가 하락이 국내 주유소 가격 인하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기름값이 왜 여전히 높은지에 대한 의문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유조선 운항 재개 이후 국내 반영까지 걸리는 시간과 선박 병목현상 등을 함께 설명하며 가격 하락에 시차가 생기는 배경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또한 보도는 유가 문제를 단순한 가격 등락으로만 다루지 않고, 재고 상황과 호르무즈 해협 변수, 그리고 최고가격제를 둘러

싼 정부의 고민까지 함께 전했는데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아직 낮아진 국제유가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과, 향후 중동 상황에 따라 유가 흐름이 다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짚어 시청자들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도 있었는데요, 현재 주유소 현장이나 소비자 반응까지 함께 담겼다면, 유가 문제를 더욱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울러 가격 변동이 실제 판매 현장과 소비자 체감에 어떤 차이로 나타나는지까지 함께 다뤘다면 한층 더 깊이 있는 보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고령층 무임승차 연령 상향 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령 기준 조정과 버스 지원 확대 방안이 함께 거론되는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시선도 엇갈리고 있는데요.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보도는 고령층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대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지난해 고령층 무임수송 손실 규모는 3,800억 원으로 해마다 손실규모가 누적되며 재정부담이 커지자, 서울시가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64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높이고, 여기서 아낀 예산으로 어르신들에게 버스비까지 지원하겠다는 것인데요, 이를 두고 시민들의 반응은 제각각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어르신들은 버스를 이용해야 할 때도 많아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인 반면, 우리나라의 빠른 고령화 속도를 고려하면, 지원 범위를 버스로 확장하는 것 역시 예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지원 기준 나이를 정할 때, 건강이나 소득 등을 고려해 대중교통 비용 부담 가능 여부 등 보다 면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전했습니다. 이 보도는 고령층 무임승차 연령 상향 문제를 다뤘습니다. 이를 단순한 제도 변경 이슈로만 보지 않고, 다양한 의견을 함께 전달했는데요, 서울시의 정책 구상과 대한노인회의 긍정적 반응, 예산 부담을 우려하는 시선까지 함께 전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임승차 연령 조정 문제가 단순히 재정 절감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점도 드러냈습니다. 어르신 혜택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과 예산 부담을 우려하는 시선이 함께 제시되면서, 이 사안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주제임을 자연스럽게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시민 반응과 정책 방향을 비교적 균형 있게 전하는 데 초점을 맞춰, 연령 상향의 실효성과 버스 지원 확대의 지속 가능성 등은 충분히 전달하지 않아 아쉬움이 남습니다. 추후 관련 보도에서 이런 부분을 함께 다룬다면, 시청자들의 이해를 더욱 도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디지털 성범죄와 교제폭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성폭력 피해가 발생하는 관계 역시 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 연인이나 직장 내 관계처럼 가까운 사이에서의 피해 비중이 커지고, 피해를 입고도 신고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관련 보도 살펴보겠습니다. 보도는 정부가 발표한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결과를 전했습니다. 불법 촬영이나 딥페이크 등의 허위 영상물 피해를 경험한 응답자의 30.2%가 전 연인으로부터 가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3년 전 조사보다 20.9%p 늘어난 수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여성 피해자의 경우 전 애인으로부터 가해를 당한 경우가 13.8%에서 42.5%로 크게 증가한 반면,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가해를 당한 비율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성추행 피해에서도 전 연인과 직장 상사, 동료, 거래처 사람으로부터 가해를 당한 비율 역시 똑같이 증가하면서, 직장 내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성폭력 피해에 대한 경찰 신고는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피해가 심하지 않았다는 이유가 주를 이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거나 신고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다는 이유도 약 30%에 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보도는 성폭력과 성추행 피해에 주목했습니다. 조사 결과를

통해 허위 영상물 피해에서는 전 연인의 비중이 크게 늘었고, 성추행 피해에서도 전 연인과 직장 내 관계에서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피해가 신고로 이어지지 못하는 상황도 함께 짚었습니다. 피해를 당하고도 경찰에 신고한 비율이 매우 낮다는 점을 제시하며, 성폭력 문제가 발생 이후의 대응과 보호까지 함께 살펴봐야 할 사안임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보도는 신고율이 낮다는 점은 잘 전달했지만, 피해자들이 신고를 주저하는 원인을 충분히 살피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증거 확보의 어려움과 신고 이후에 대한 불신, 피해자가 느끼는 부담까지 함께 다뤘다면 문제를 더 분명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TV 시청자 평가였습니다.

※대표 방송스틸컷

일시/장면설명	일시/장면설명
2026년 6월 7일 04시/ 김정원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	2026년 6월 14일 04시/ 김경아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일시/장면설명	일시/장면설명
2026년 6월 21일 04시/ 김홍태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	2026년 6월 28일 04시/ 안지연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
	